

이런 주장들이 너무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가 약품이나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등 다른 상품에는 줄곧 적용해 오던 조치이다. 일례로 어떤 회사가 새로운 약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것을 곧장 판매할 수는 없다. 약의 효능이나 약품에 대한 인체의 반응은 대단히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엄격한 검증 절차로 그 약이 부작용을 압도할 만한 효능이 충분한지 확인한 뒤에야 출시를 허용한다. 따라서 금융 상품도 판매하기 전에 안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제인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일부러 제한적인 규칙을 만들어 우리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한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환경을 단순화시키지 않는 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는 세상의 복잡성에 대처해 나갈 수 없다. 우리에게 규제나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당시지인 경제 주체들보다 관련 상황을 반드시 더 잘 알기 때문이 아니다. 규제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정신적 능력에 대한 겸허한 인정인 것이다.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질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교육을 잘 받은 노동력은 경제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육 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루어 낸 눈부신 경제적 성공과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 중의 하나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침체를 비교해 보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지식이 부의 주요 원천이 되는 이른바 '지식 경제'가 출현하면서 교육, 특히 고등 교육은 변명으로 가는 열쇠가 되었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높은 교육 수준이 국가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사실 놀라울 정도로 빈약하다.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은 사람들이 더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산성 향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또 지식 경제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이 경제 발전에 필수 요소가 되었다

는 주장도 옳지 않다. 우선 지식 경제라는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다. 역사적으로 지식은 언제나 부의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탈산업화와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의 대다수 일자리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지식 요건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지식 경제에 더 중요하다는 고등 교육도 그것이 경제 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 나라의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교육 수준이 아니라 생산성 높은 산업 활동에 개인들을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회 전체의 능력이다.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이것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1997년 총선 기간에 차기 내각의 세 가지 정책 최우선 과제가 어떤 것인지 요약한 말이다. 신노동당으로 이미지를 개선했던 노동당은 97년 총선을 승리로 근 20년에 걸친 야당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신노동당의 교육 정책이 그 후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이 구호가 적절한 시기에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블레어 전 총리의 뛰어난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 능력도 이라크전 때부터는 좀 퇴색한 감이 있지만 말이다.) 미스터 블레어 이전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교육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썼지만, 블레어 전 총리가 선거에 나섰을 때처럼 교육이 주목을 받은 적은 없었다. 이때는 1980년대 이후 지식 경제의 부상을 목격한 후 전 세계가 교육이야말로 경제 번영의 열쇠라고 확신

한 시기였던 것이다. 허물며 골똥 산업이라 부르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교육이 중요했는데 교육이 아니라 두뇌가 부의 원천이 되는 정보화 시대에는 그야말로 교육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났다.

이 주장은 더 생각해 볼 여지도 없는 논리처럼 보인다. 더 배운 사람은 생산성이 더 높다. 그 사람들이 보수를 많이 받는 걸 보면 생산성이 높다는 증거 아닌가? 그러니 배운 사람이 더 많은 경제일수록 생산성도 더 높아진다는 것은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만큼이나 논리적인 이야기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즉 일부 경제학자들의 전문 용어로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나라에는 더 적다는 사실도 이 논리를 증명한다고 봐야 하지 않는가?

OECD 국가들에서는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는 기간이 평균 9년인 데 반해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그 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는다. 또 기적적인 성장을 이룬 일본,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교육 수준도 잘 알려진 사실 중의 하나이다. 이 나라들의 교육은 낮은 문맹률이나 각종 교육 기관에 다니는 높은 입학률과 같이 양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뛰어나다. 예를 들어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수학 과학 성취도 평가(TIMSS)나 15세 청소년들이 수학적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프로그램(PISA) 같은 평가에서 이 나라들은 항상 최상위권을 기록한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학교는 도대체 왜 다냐...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상식'에 반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

경제 발전에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정평이 나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예부터 살펴보자. 1960년 타이완의 문맹률은 46퍼센트나 되었고, 필리핀의 문맹률은 28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타이완은 인류 역사에 남을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인 반면에 필리핀은 그다지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 1960년에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달러로 타이완의 122달러에 비해 거의 두 배였다. 그러나 현재 타이완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필리핀의 거의 열 배에 달한다(1만 8000달러 대 1800달러). 같은 시기에 한국의 문맹률은 29퍼센트여서 필리핀과 비슷했지만 아르헨티나의 9퍼센트에는 훨씬 웃돌았다. 문맹률이 더 높았음에도 한국은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해서 1960년에 아르헨티나의 5분의 1이던 국민소득(82달러 대 378달러)이 이제는 세 배(2만 1000달러 대 약 7000달러)가 되었다.

교육 말고도 한 나라의 경제 실적을 결정하는 요인은 많다. 그러나 위에서 든 사례들을 보면 여러 요인 중에서도 교육이 동아시아 경제 기적의 주요 요인이었다는 신화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발전 초기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던 반면에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교육 수준이 더 높았음에도 경제적으로 그다지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경우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례를 봐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꼭 경제가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980년에서 2004년 사이에 이 지역 문맹률은 60퍼센트에서 39퍼센트가 되어 눈에 띄는 감소 추세를 보였음에도,¹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은 매년 0.3퍼센트가 떨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교육이 경제 발전에 그토록 중요하다면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교육이 경제 성장에 별달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는 여기서 예로 든 동아시아 국가들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극단적인 경우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일반적인 현상이다. 세계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를 가르치고 있는 란트 프릿쳇(Lant Pritchett) 교수가 “교육은 전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라는 제목으로 200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1960년에서 1987년 사이의 기간 동안 수십 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모은 자료를 토대로 교육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는지 여부를 살펴본다.² 널리 인용되는 이 논문에서 프릿쳇 교수는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결론지었다.

역사도 몰라요 생물도 몰라요

배운 사람이 더 많으면 나라도 더 부자가 된다는 얼핏 보면 당연한 것 같은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그토록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교육이 우리가 믿는 것보다 경제의 생산성 향상

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모든 교육이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는 대다수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에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과목이 많이 있다. 문학, 역사, 철학, 음악 등이 그 예일 것이다(Thing 3 참조). 순전히 경제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다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것이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을 더 나은 시민으로 길러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교육을 포함한 모든 것을 생산성 향상에 열미나 도움이 되는지로 가늠하는 시대에 풍요로운 인생이니 더 나은 시민이니 운운하는 것이 점점 더 공격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알지만 이런 점들이야말로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하는 중요한 (내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심지어 생산성 향상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하는 일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되는 데 생물이 무슨 소용이며, 감각 있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데 수학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이런 과목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직종에서조차 실제 업무를 보는데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것, 심지어 대학에서 배운 것도 크게 써먹지 못한다. 자동차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학교 물리 시간에 배운 지식과 그의 생산성 사이에 얼마나 관계가 있겠는가? 많은 직종에서 현장 실습과 도제 제도를 중요시하는 것도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학교 교육이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다. 따라서 생산성과 연관이 있다고 간주되는 과목들마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

산성 향상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한 나라의 수학 성적과 그 나라의 경제 실적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³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2007년 국제 수학 과학 성취도 평가의 수학 과목에서 미국의 4학년생들은 수학 잘하기로 유명한 동아시아 어린이들만큼만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어린이들보다도 더 성적이 나빴다.⁴ 같은 시험을 본 유럽 국가 어린이들은 영국과 네덜란드만 제외하고 모두 미국 어린이들보다 성적이 더 나빴다.⁵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인 노르웨이 (시장 환율로 계산한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볼 때 1위, Thing 10 참조) 8학년 학생들은 다른 선진국 학생들뿐 아니라 리투아니아, 체코 공화국,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세르비아 등 훨씬 가난한 나라 학생들에 비해서도 점수가 낮았다.⁶ (이 나라들이 모두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사실이다.) 교육열이 높고 첨단 연구 분야에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스라엘의 8학년 학생들은 노르웨이보다 못했고, 심지어 불가리아보다 점수가 낮았다. 과학 시험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지식 경제는?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에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하더라도 지식 경제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이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자는 독자들도 많을 것이다. 아이디어가 부의 원천으로 점점 더 확고하게 자리 잡아 가는 추세를 고려하면, 교육은 한 나라의 번영을 결정하

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식 경제라는 말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냐에 따라 그 나라가 부자가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었다는 의미에서라면 우리는 항상 지식 경제 사회에서 살아온 셈이다. 10세기경까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던 이유는 다른 나라에 없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이, 활자, 화약, 나침반 등 몇몇 이름난 것들 이외에도 중국이 갖고 있던 기술과 지식은 엄청났다. 19세기 영국은 기술 혁신을 선두에서 이끌면서 세계적으로 경제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2차 대전 직후 독일은 페루나 멕시코만큼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아무도 독일을 개발도상국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전쟁에 져어도 2차 대전 전에 독일을 강력한 산업 대국으로 만든 기술적, 조직적, 제도적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의 중요도는 최근 들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인류가 전체적으로 지닌 지식의 양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 대다수의 사람이 과거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많은 업종에서 평범한 노동자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지식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선진국에서 더 그렇다. 그냥 듣기에는 약지 같은 이 논리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보자.

먼저, 제조업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선진국 노동자들 중 높은 교육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숙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수가 많아졌다(Thing 3.9 참조). 슈퍼마켓에서 상품 진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햄버거 만드는 일, 사무실 청소 등이 그 예이다. 교육을 요

로지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만 간주한다면,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갈수록 노동자들의 평균 교육 수준을 낮추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계가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대체하게 된다. 그에 따라 개별 노동자들이 과거에 같은 일을 하던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하는 작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경제 전반의 생산성은 향상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요즘 선진국의 상점에서 일하는 점원들은 텃섀 같은 건 못해도 상관없다. 과거에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식이었지만 이제는 바코드 기계가 그 일을 대신해 준다. 또 다른 예로 가난한 나라의 대장정이는 보쉬나 블래 앤드 테커에서 일하는 직원들보다 연장을 만드는 금속의 성질에 대해 더 많이 알 것이다. 예는 또 있다. 가난한 나라에 널리 있는 작은 전파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삼성이나 소니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아마도 고칠 줄 아는 기계 가짓수가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기계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력 있는 한 학파에 서는 자본가들이 고의적으로 노동자들을 비숙련화한다고 생각한다. 생산 공정을 최대한으로 기계화하면 노동자들을 쉽게 대체할 수 있고, 따라서 노동자들을 통제하기도 쉬워지므로 자본가들은 설명 그것 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계화를 통한 비숙련화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⁷ 기계화 과정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그 결과는 기술적으로 발달한 경제일수록 교육받은 사람을 덜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스위스 페리독스

경제가 발전하면서 평범한 노동자들이 교육을 더 받아야 할 필요는
늘지 않더라도 고급 직종의 노동자들은 더 많이 교육받을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나라보다 생산
적인 지식을 더 많이 창출해 내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
이니까. 그렇다면 한 나라의 번영도를 결정짓는 것은 초등학교보다는
대학교의 질에 달려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른바 지식 위주의 시대에서조차 고등 교육과 경제 번영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간단명료하지 않다. 스위스의 놀랄 만한 사례
를 들어 보자.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산업화된 나라 중의
하나이다(Thing 9, 10 참조). 그런데 이 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놀랍게
도 선진국 중 가장 낮아서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다른 부자 나라
대학 진학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1996년까지도 스위스의 대
학 진학률은 16퍼센트로 OECD 평균 34퍼센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⁸ 그 이후 이 비율은 상당히 높아져서 유네스코 자
료에 따르면 2007년에는 47퍼센트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선진국 중에
서 가장 낮고, 특히 대학에 가는 비율이 높은 핀란드(64퍼센트), 미국
(82퍼센트), 덴마크(80퍼센트)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스위스에 비해 헬
센 못사는 한국(66퍼센트), 그리스(91퍼센트), 리투아니아(76퍼센트), 아
르헨티나(68퍼센트) 등의 나라들마저 스위스보다 헬센 높은 대학 진학
률을 보인다는 점은 특히 흥미롭다.

주요 경쟁자들은 물론이고 헬센 가난한 나라들에 비해 이렇게까지

고등 교육을 동한히 하고도 스위스는 어떻게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생산성을 기록하는 나라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을까?

나라마다 대학 교육의 질에 큰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냐는 것
이 가능한 대답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한국이나 리투아니아의 대학들
이 스위스의 대학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대학 가는 사람
비율이 헬센 낮아도 한국이나 리투아니아에 비해 부자가 될 수 있었
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스위스를 미국이나 핀란드와 비교하면
이 설명은 빛을 잃고 만다. 스위스 대학이 너무나 우수해서 미국, 핀
란드에 비해 대학 가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도 경쟁
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스위스 페리독스' 역시 교육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낮다는 사실
로 설명된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낮은 것은 이
시기의 교육이 지어실현, 모범 시민 양성, 민족 정체성과 같은 것을
함양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면, 고등 교육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낮은 것은 고등 교육의 기능 중 경제학에서 '분류'라 일컫는
기능이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고등 교육은 피교육자들에게 생산성과 관련된 지식을 상당 정
도 전수해 주지만, 그것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그 피교육자들이
얼마나 고용에 적합한지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⁹ 많은 직종에서 중요
하게 여기는 능력은 일을 하면서 배워 갈 수 있는 전문 지식보다는 전
반적인 지능, 의지, 조직적 사고력 등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역사나
화학을 전공하면서 배운 지식은 보험 회사나 교통부 공무원으로 근무
할 때에는 거의 쓸모가 없겠지만,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대학
을 가지 않은 사람보다도 똑똑하고, 의지가 강하며, 조직적 사고력이

있다는 신호가 된다. 대졸자를 모집하는 회사는 각 직원의 전문 지식 보다는 이런 일반적 능력을 보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얻은 전문 지식은 대부분 직장에서 수행할 업무와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고등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면서 대학을 확장할 만한 여력이 있는 최상층 내지는 중상층 국가들에서는 고등 교육을 둘러싸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 (스위스마저도 이 현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한 대학 진학률에서 짐작할 수 있다.) 대학을 가는 사람들의 비중이 일정 선을 넘어서면 팬층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가령 국민의 50퍼센트가 대학 진학을 한다면 대학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능력 분포도의 아래쪽 절반에 속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애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일하는 데에 하등의 쓸모가 없는 것을 배우면서 '시간 낭비'를 하게 되리라는 걸 잘 알면서도 대학을 가게 된다. 저마다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면 고등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대학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대학 진학률이 더 높아지면 대학을 가야 하는 압박은 한층 증가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현상은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이제 '모든 사람'이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돋보이려면 석사, 심지어 박사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학위들을 밟는 과정에서 앞으로 하는 일의 생산성을 올릴 내 용을 배우게 될 확률은 아주 작을 테지만 말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대학 진학률 10~15퍼센트로도 세계 최고의 국민 생산성을 기록한 스위스의 사례를 고려할 때 그보다 더 높은 대학

진학률은 사실 불필요하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실험 지식 경제의 부상으로 기술 요건이 많이 올라 스위스의 현재 대학 진학률 40퍼센트 대를 하한선으로 친다 하더라도(나는 이 하한선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미국, 한국,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대학 교육의 절반 정도는 기본적으로제로섬 게임인 '분류' 과정을 위해 낭비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나라들의 고등 교육 현실은 영화관에서 화면을 더 잘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장면을 생각나게 한다. 한 사람이 서기 시작하면 그 뒷사람도 따라서 서게 되고, 그러다가 일정 비율 이상의 사람들이 서면 결국 모두가 서서 영화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말이다. 영화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화면을 더 잘 볼 수도 없으면서 앉아서 보지도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교육이나 기업이나

기초 교육뿐 아니라 고등 교육까지도 한 나라의 번영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한다면 경제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역할을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한다.

부자 나라의 경우 고등 교육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어야 한다. 이 집착 때문에 건전하지 못한 학력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그 결과 많은 나라에서 대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났다. 어떤 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아주 높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라면 진학률이 100퍼센트인들 무슨 문제랴. 그러나 대학 교육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착각은 하

지 않아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더 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어린이들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려면 교육 너머로 눈길을 돌려 제대로 된 제도와 조직을 건설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진정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구성된 개인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각 개인을 잘 아울려서 높은 생산성을 지닌 집단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런 조직화의 결과는 보잉이나 폭스바겐과 같은 거대 기업일 수도 있고, 스위스와 이탈리아에 많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일 수도 있다(Thing 15 참조). 이런 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리스크 감수를 장려하는 일련의 제도가 필요하다. 유치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교역 정책(Thing 7, 12 참조),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자본'을 제공하는 금융 시스템(Thing 2 참조), 제대로 된 파산법으로 자본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좋은 복지 정책으로 노동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제도(Thing 21 참조), 연구개발과 노동자 훈련에 관한 공공 보조금과 규제 정책(Thing 18, 19 참조) 등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은 소중하다. 그러나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고 더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교육을 확장하면 크게 실망할지도 모른다. 교육과 국민 생산성 사이의 연관성이 약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과도한 열의는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산적인 기업과 그런 기업을 지원할 제도를 확립하는 데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